

충남발전연구원-민교협 공동심포지엄

■ 개요

- 주 제 : 지방자치시대의 공공성
- 공동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일 시 : 2013. 6. 28(금) 14:00~17:00
- 장 소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하누리강당

■ 주제의 의미와 배경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제도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이어져 왔다. 그에 따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제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치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재현하는 최고 기관이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권력 체계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개별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에 따라 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 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1952년 시·읍·면의회의원선거(4. 25)와 시·도의회의원선거 (5. 10)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래 군부 정권하에서 지방자치제는 전면 중단되기에 이른다. 군부 독제가 종식된 이른바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 에서 지방자치제는 1991년 절차적 수준에서는 부활하였으나 임명제 단체장 체제가 존속함으 로써 반쪽에 머물러 있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는 1995년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됨으 로써 (6. 27)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결코 시간적 발전과는 반드시 상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착되었을지 모르나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최근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역시 실제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부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국 사회와 정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개인의 권리 문제와 함께 공동체 정신 내지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 사이에 자리한 격차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인의 권리를 위임받아 이를 재현하는 정치적 원리와 절차적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난 시기의 한국의 지방자치를 ‘1단계’의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이 1단계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지자체 간에 편차가 있지만—상당한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2단계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가치로서 공공성을 설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행정에 구현될 수 있는가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제와 공공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 모임을 준비하고자 한다.

